

2000년 임금협상과 나이루(NAIRU)

조준상

한겨레신문 기자

1

이 글은 필자가 번역한 「유럽 고실업의 거시경제적 뿌리」¹⁾ 라는 논문의 들머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번역하며 들었던 생각은 이렇다.

“(논문의 내용은)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이루’라는 시대착오적인 망령이 한국을 떠돌고 있다.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슬며시,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흔히들 미국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유럽보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서라고 한다.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편다. 설사 이와는 다른 주장을 펴는 이들도 미국은 실업률이 낮은 반면 소득불평

등이 유럽보다 훨씬 크다는 반론을 펴는 정도다. 이 논문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유럽의 고실업의 원인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아니라,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의도적인’ 긴축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이고, 그 핵심에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나이루’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이루란 괴물이 뭐기에 노동자들의 고통을 그렇게 증가시키는 것일까. 나이루(NAIRU)는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의 약자이다. 우리말로 옮기면 ‘인플레이션에 대해 비가속적인 실업률’

1) 이 글은 분량관계로 이번 호에 같이 실지 못하고, 다음 호에 실립니다.

또는 '비인플레이션적 실업률'이다. '추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실업률'이라는 뜻이다. 언제부터인가 나이루는 보통 '자연실업률'(natural unemployment rate)로 통하기 시작했다. 그 시기는 대체로 198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의 이론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확립되면서부터이다.

2

하지만 자연실업률과 나이루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원래 자연실업률은 실업자가 취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 종사하면서 실업을 택하고 있는, 곧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시적인 마찰적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 노동자들도만 이뤄져 있을 때의 실업률이다. 이를테면, 고 임금 등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본인의 뜻 이외의 어떠한 의적 강제나 강요, 강압적인 분위기 등 당사자를 밀어내는 요인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자연실업률 개념은 경제학의 핵심가치인 완전고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자연실업률에서의, 곧 완전고용 수준에서의 경제성장률이 흔히 '잠재 성장률'이라고 한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연실업률, 곧 나이루는 이와 전혀

다르다. 나이루는 실업의 내용(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시적 마찰적 실업인가 아닌가)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율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나이루가 자연실업률로 통하게 되고(잠재 성장을 역시 나이루 수준에서의 성장률이 되고), 그래서 완전고용의 가치를 박탈하게 되는 과정은 '자본주의의 금융화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1972년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를 배경으로 자본주의의 금융화 과정은 1980년대 본격화한다. 자본주의의 금융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곧 물가 안정을 뜻하는 것이다. 흔히들 IMF체제의 성격을 일컬어 "물가 안정을 통한 금융자산의 가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체제"(유철규, 『98·99 구조조정 정치경제학』, 1999년 11월 한국사회과학연구소)라고 부르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3

이로부터 나오는 나이루의 실천적·계급적 의미는 명확하다. 임금 소득자에 대해 자산 소득자를 정책의 우선 순위애 놓는다는 것이다. 나이루가 높아졌다는 것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흡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말해 고용이 늘수록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질 거라는 얘기다. 달리 말하면 노동 수요보다

노동 공급이 모자라게 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이렇게 오른 임금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임금 압박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의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최근 임금 협상을 앞두고 '고임금이 물가 불안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협상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선제적인 대응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나이루 개념의 본격화는 1997년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나이루의 은밀한 등장은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 개정과 함께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으로 설정됐다. 이전에 동등하게 고려됐던 성장(과 이에 따른 고용)은 사라진 것이다. 그 이전까지 공식 실업률은 2~2.5%였는데, 이를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완전고용에 가깝다"거나 "사실상 완전고용"이라고 표현하곤 했다.

1998년 하반기부터 나이루는 부지불식간에 대중의 머리 속에 침투했다. "앞으로 실업자 100만명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간헐적인 정부 관료들의 발표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강제하는 대량실업의 현실에 눌러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나이루는 1999년 하반기, 특히 3/4분기 경제성장률이 2/4분기 9.9%에 이어 12.3%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경기과열 논쟁이 붙은 10월경부터 본격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²⁾

4

나이루란 개념을 통해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자본과 수구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이미 시작됐다. 대부분의 학자들 역시 성장의 내용을 자세히 따지지도 않은 채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만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이는 경기과열 논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논쟁은 재정경제부를 한 축으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다른 한축으로 하여 인플레이션 여부와 선제적인 이자율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2000년 소비자물가률 3%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이자율 인상을 통해 경기과열을 잠재워야 한다는 쪽이

2) 1999년 11월30일 한국은행은 "1991년 이후 2%대에 머물던 자연실업률(나이루-필자)이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 기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영향으로 1998년 3.6%로, 1999년 상반기 3.8%를 기록해 아이엠에프 사태 발생 전인 1996년의 2.3%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었다. 1999년 11월 LG경제연구원의 한 연구 결과는 나이루를 4%대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로 이 연구 결과의 머리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긴 하지만, 물가상승률의 단기추이를 쉽게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이른바 비인플레이션 실업률(나이루)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강조는 필자: 사실 나이루는 경제학계 내부의 합리적 논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이론적·경험적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때의 산물인 측면이 짙다.)

었다. 여기에는 지금의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들이 경기과열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실제 성장률이 이들이 주장하는 (나이루에 바탕한) 잠재 성장률보다 높다는 게 유일하다. 반면 재경부는 소비자물가를 3.8%로 억제하고, 지금의 9%대 이자율이 적정하다는 판단 아래 이자율 인상은 필요없다고 내세웠다. 방만한 통화정책 운용으로 인한 '근원적 인플레이션'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돈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그때 적절히 회수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말 재경부가 소비자물가 억제선을 3% 이하로 낮춰 잡았다.³⁾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200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9년(0.8%)의 4배인 3.2%에 이를 것이라며 2%대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역시 억제선을 2.5%로 내려잡고 상하 1% 범위 안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성장률을 5.8%(10월초)에서 7.8%로 올려잡으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선으로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

원 논리대로 하면 이전 실제 성장률 예상치가 잠재 성장률인 4~5%를 웃돌 때 물가 압력이 3.2%인데, 실제 성장률 예상치가 이전보다 2%포인트 늘어났을 때도 물가상승 압력이 그대로라는 것은 자चे 모순이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가 선제적인 경기안정책을 편다면 성장률은 6.4, 물가는 2%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곧 정부가 현재 기조대로 가져갈 경우 발생하는 물가상승률 3.2%도 너무 높다는 얘기를 꺼내고자 한 것이다.

두달 전과 달라진 상황이라고 11월 하순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뿐이다. 재경부가 소비자물가 억제선을 낮춰 잡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환율 하락을 정부가 용인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환율 하락은 수입물가 하락을 가져와 국내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환율 하락은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환율 하락의 효과가 통상적으로 6개월 이후에 작용한다는 점에 비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을 희생하고 물가하락을 거

3)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200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9년(0.8%)의 4배인 3.2%에 이를 것이라며 2%대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역시 억제선을 2.5%로 내려잡고 상하 1% 범위 안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성장률을 5.8%(10월초)에서 7.8%로 올려잡으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선으로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논리대로 하면 이전 실제 성장률 예상치가 잠재 성장률인 4~5%를 웃돌 때 물가 압력이 3.2%인데, 실제 성장률 예상치가 이전보다 2%포인트 늘어났을 때도 물가상승 압력이 그대로라는 것은 자चे 모순이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가 선제적인 경기안정책을 편다면 성장률은 6.4, 물가는 2%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곧 정부가 현재 기조대로 가져갈 경우 발생하는 물가상승률 3.2%도 너무 높다는 얘기를 꺼내고자 한 것이다.

냥한 셈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임금 억제를 겨냥했다는 측면이다. 재경부는 임금 인상을 억제해 소비자물가를 잡는다는 구도를 세웠다는 것이다. '임금 압박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11월10일 재경부가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3/4분기부터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질렀다고 선전하고 나선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일보』는 이 주장을 '기업 임금 상승률 다시 생산성 추월, 산업경쟁력 빨간 불'이란 제목으로 11월11일치 1면 머릿기사로 다뤘다. 현재 재경부는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면 그것은 지나친 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트리고 있으며, 수구언론은 이를 지지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이자율 인상을 통한 경기안정책을 요구하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정부가 이자율을 올리자 않는 것은 4월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몰아부치고 있다.⁴⁾

"정부는 적어도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저이자율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고속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

척 경기변동 이론은 집권당은 선거에 유리한 경제여건을 만들고 싶어 통화급 확대, 저이자율 정책,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고성장, 저실업이라는 경제여건을 조성하지만, 선거후에는 이런 무리한 정책의 대가로 인플레이션과 고실업 등 상당한 후유증을 치르게 된다고 설명한다."(연세대 조하현 교수, 『세계일보』 1999년 12월 30일치 시론)

5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하필 왜 인플레이션 억제선이 3%냐는 것이다. 앞서 논의했다시피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있는데, 하나는 실업률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실업률 불변의 경제성장률'(CURG)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8년 하반기부터 당시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이 "앞으로 100만명 정도의 실업률은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던 발언의 의미는 정확히 바로 이것이다. 정부와 각종 연구단체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4.5%대로 보고 있는데, 이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

4) 이자율 인상은 비록 직스럽지도 확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장됐다는 연장선상에서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선제적인 비선제적이든, 소폭이든 대폭이든 이자율 인상은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정과 실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자율 인상은 투신사 부실을 더욱 키워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문제는 경기가 과열됐다면 이자율 인상이 아니라, 주식거래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 외국자본 유입 규제 등 이자율 인상이 동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낳는 정책수단을 동원해 이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진보정당이 이 점을 부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의 이자율 유지 정책을 4월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한 인위적인 무양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면적이라는 얘기가. 이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력과 동일한 논리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되고 만다.

성장을 유도해야 나이루 밑으로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하필 왜 3%냐는 물음이 중요하다. 3%가 과연 '위험수위'냐는 것이다. 노동계는 실업을 하락과 고용 증가를 위해 성장률을 높이고 3%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허용하면 왜 안 되느냐고 따져야 한다. 사실 기업에 중요한 것은 실질 이자율(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이다. 완만히 물가가 오르는 것은 기업에도 나쁘지 않다.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명목이자율 상승폭을 물가 상승폭과 같게 가져갈 경우 실질 이자율은 불변이기 때문이다.⁵⁾

"경미한 인플레이션은 실질 이자율을 하락시켜 오히려 투자와 성장을 촉진한다고 믿는 경제학자들도 많다. 1996년 하버드대학의 배로 교수는 20% 이하의 인플레이션은 성장을 해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IMF의 샤렌 박사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게 되는 위험수위를 8%로 추정했다. 1995년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이스라엘 히브루대학의 브루노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을 해친다는 증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도 채 안 되는 미미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처지에서는 지금 긴축정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들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3~4% 정도로 '위험수위'와는 거리가 멀다."(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하지만 고용된 노동자, 특히 조직 노동자들은 하나의 선택에 부닥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현재 기업별 노조로 묶인 조직 노동자들은 실업·반실업 노동자의 고용을 위해 성장률을 높이고 이에 따르는 완만한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100% 실질임금 원상 회복을 내걸 것인 가라는 새로운 선택의 문제에 부닥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선택은 개별 사업장에서는 받아내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개별 자본가에게 양보하는 게 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실업·반실업 노동자의 고용을 위해 조직 노동자가 치러야 할 대가의 성격도 띠고 있다. 2000년 임금·단체교섭에는 단순한 '보상심리'만이 아니라, 이런 정책적 고민이 따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나이루에 대한 노동계의 투쟁은 이런 치밀함을 요구한다.⁶⁾

5) 미국 매사추세츠대 폴 크루그만 교수는 1998년 하반기부터 일본은행이 0.5% 수준인 단기금리를 올리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그는 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실질 이자율이 대폭 카이더스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유감해 저축 대신에 소비를 하게끔 부추겨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일본 경제는 더욱 침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일본 경제의 이자율 인상 여부와 관련된 크루그만의 이 진단은 우리나라에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6) 이란 점에서 한국노총의 임금인상요구를 13%와 민주노총의 임금인상요구를 15.2%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갖는 의미는 이중적이다.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계층의 고용 증대 차원에서 정부가 내거는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수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현행 이자율의 유지와 건실한 경기부양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사용자, 수구언론이 떠는 '임금 압박 인플레이션' 문세와 정면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다.

앞서 논의했다시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을 올린다는 정책은 노동계에 불리한 정책이다. 이 논리가 전제하는 것은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으로부터 민간에 풀려나가는 통화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경로, 어쩌면 더 중요한 경로는 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기업의 미래수익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 하락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⁷⁾의 역작용을 낳아 소비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투자 수요 감소를 낳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소비수

요 증가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자율 인상은 주식시장의 폭락과 실물경제 침체를 자초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주식시장의 기대구조는 소폭의 이자율 인상이 역설적으로 대폭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미국과는 전혀 다르다. IMF의 고금리 긴축정책을 국내 진보진영 및 조지프 스티글리츠 전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등과 같은 세계적 석학들의 비판, 급속한 실물경제 붕괴라는 현실에 힘입어 저금리 확장정책으로 전환시킨 뒤부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폭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주가 폭락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이자율 인상이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에게 '무조건 팔아라'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라는 점에 문세의 심각성이 있다. 이자율이 오를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이를 한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기업의 채산성 악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정도로 소비수요를 부추겨온 경

하나: 정부가 내어놓은 미명하에 실질한 거시경제 목표치를 거부한다는 상징적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지니친 보상 실리엔텀 치우칠 경우 실업·반실업 노동자들에게 줄 수적적인 의미이다. '다른 사람의 희생물 대가로 살아남은 자들의 진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서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실업·반실업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를 향한 사회적 연대 돌출을 저지하거나 저지하려는 '물꼬' 이라도 보여야 한다. 임금 인상론의 일부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나 신원별 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금 등으로 각출하는 결의를 모으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수익이 없게나마 넓은 일부 전자·반도체·자동차 등 대기업의 경우 수익의 일부를 온·허청 기업과의 임금 균등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치않는 양로그교섭으로 아예 배제되거나 몇비짜려운 리콜제, 제도화에 이제부터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7) 투자인 주식 가치의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미래 소득' 흐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돼 소비자가 '현재 소비'를 늘린다는 말이다. 주가 하락은 그 역으로 작용한다

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면 소비수요는 다시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 전망이 악화하면 이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 한국 경제의 관건은 주식 시장의 연착륙과 함께 거품이 아닌 건실한 실물경제 회복을 복돋우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자율 인상으로는 이 목적을 결코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주식 시장의 연착륙을 이룰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자본이득세'로 불리는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가 있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자본 진영의 진단은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협박이다. 아니면 증권거래 수수료를 0.2%포인트 정도 소폭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단기 외국자본의 양을 규제하는 것이다. 유입자본의 일부를 저리 또는 무이자로 한국은행에 예치하게 하는 가변예치의무금제(VDR)가 그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에 흘러드는 외국 단기자본의 절대량이 줄어들어 주가에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입 규제는 우리나라 제조업 가격경쟁력의 핵심을 이루는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달러 초과공급에 따른 지나친 환율 하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인상과 임금 감소에 따라 1998년 달러표시 단위노동비용은 40% 이상 떨어졌다. 정부는 VDR 도입을 통해 환율 하락을 막는 방안은 아예 제껴두고 있다. 환율 하락이 방치되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손쉬운 방안은 결국 임금 인상 억제다. 가격경쟁력을 이루는 핵심 구성요소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임금 인상 억제로 보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임금은 충분히 오를 수 있고 건실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올라야 한다. 이자율 인상 외의 다른 정책수단이 뒷받침된다면 그 폭은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한국 사회의 천박함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은 다른 정책수단의 적용 가능성은 아예 배제한 채 오로지 이자율 인상만이 마치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